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 컨소시엄 합동 토론회
이주노동자의 재통합 지원을 위한 한국사회의 준비

사 회
박 경 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격려사
배 일 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발 제
최 준 기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지원 컨소시엄 대표, 용산나눔의집 원장) p. 1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귀환을 위한 지원단체의 노력과 정부의 과제”
최 의 팔 (한국국제이주연구소 소장,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p. 10 “이주노동자의 행복한 귀환과 재통합지원을 위한 각국 사례”
사례발표
활 동 가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활동가)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귀환프로그램 소개”
김 연 정 (경기도제2청사지역경제과) “지자체 귀환 프로그램 운용 소개”
토 론
띠 두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방글라데시 조직팀장)
샤 니 (외국인노동자살림의집)
이 우 영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차 용 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

일시: 2007년 5월 30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25호

주최: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 컨소시엄
(대표단체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한국국제이주연구소

후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귀환을 위한 지원단체의 노력과 정부의 과제

최준기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지원 컨소시엄 대표)

1. 들어가는 글
2. 귀환프로그램의 약사
 - 1) 귀환컨소시엄 결성 배경
 - 2) 귀환컨소시엄 조직 및 경과
3. 귀환프로그램의 내용
 - 1) 목적
 - 2) 구성
 - 3) 주요사업
 - 4) 사업흐름도
4. 귀환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 1) 귀환컨소시엄의 성과
 - 2)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 3) 지원단체가 겪는 어려움
5. 귀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지원의 필요성
 - 1) 정부부처
 - 2) 기업체
6. 나가는 글

1. 들어가면서

이주노동자의 국제적인 이동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입국의 경제적 필요와 송출국의 경제적 상황들이 만들어 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있어서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을 단순한 개인적 수입의 확대 행위로 보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필요성에서 기인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급속도로 증가되었던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에 대해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인식의 부족과 국가적인 장기적 방안의 미비로 여전히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이주노동자 스스로에게도 장기적인 삶의 대안을 형성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는 최근 30여 년 동안 급속도로 진행된 이주노동의 흐름을 인식하면서 이제는 현상적인 문제-임금체불, 산재, 의료, 인권 등-에 대한 해결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즉 근본적인 이주노동의 원인과 그 극복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필연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에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의 경험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새로운 발전적 대안으로서 귀환 컨소시엄(Reintergration)을 결성하였고, '귀환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이루게 되었다. 한국에서 시행된 귀환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주노동자 개인은 물론 본국 가족과 본국(송출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성숙을 측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본고는 이주노동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미래적 지향을 위한 문제 인식과 제기로서, 귀환컨소시엄 결성배경, 프로그램의 내용, 실질적인 평가와 문제, 그리고 외부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한 것이다.

2. 귀환프로그램의 역사

1) 귀환 컨소시엄(consortium) 결성 배경

한국에 귀환프로그램이 알려진 것은 1996년 MFA(Migrant Forum in Asia)가 한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현 외국인이주 · 노동운동협의회)에 홍콩의 AMC(Asia Migrant Worker Center)의 귀환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한 것이 그 시작이다. 당시 AMC의 필리핀 이주노동자 귀환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의 소비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작하여 저축 모델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후 한국에서 몇몇 센터를 중심으로 필리핀의 귀환 모델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 내 미등록 노동자의 숫자가 많고 그 노동체도가 모호하여 이주노동자 스스로 귀환하는 전제를 설정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귀환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단순히 국가 단위로만 묶음으로써 공동체 내 상호 간의 신뢰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으며, 세 번째는 전문적인 기술의 보급에 대한 문제가 부족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환프로그램에 대한 이주노동자 센터와 이주노동자 간의 확고한 신뢰의 부족 등이다.

1996년 이후 한국의 이주노동자 센터가 귀환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주노동자 귀환에 대한 체계적인 도모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많은 이주노동자 센터가 귀환 사업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었지만, 개별적 센터가 가지는 역량과 정보는 부족하였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개별적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지원 그리고 구체적 추진은 개별 센터 차원에서 시행하지만 이와 동시에 귀환 사업을 위한 정보 통합, 새로운 정보의 학습과 다양한 내용 개발, 그리고 사회적 여론의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귀환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 데, 바로 이 조직이 ‘귀환컨소시엄’이다.

2) 귀환 컨소시엄의 결성 및 경과

2004년 7월, 18여개 이주노동자 단체가 함께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 이는 귀환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별적 센터의 역할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환에 대한 연구와 방법을 위한 발전적 노력이 구체화된 것이다.

귀환 컨소시엄의 구성 이후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귀환 관련 자료집을 만들게 되었고, 2006년부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구체적인 자료집 제작과 함께 귀환사업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질적인 기술교육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귀환컨소시엄의 결성 및 경과에 대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일시		내용
2004년	7월	귀환컨소시엄 결성
	8월	아름다운 재단 사업 선정
	11월	실무자 및 공동체 리더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 교육
2005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심층년접 사업 선정
	5월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세미나 개최
	8월	송출국 현지 실태 조사
		아름다운재단 지원 자료집 발간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프로그램” 기획사업 선정 이주노동자 욕구조사 시행
12월	해외 심층면담 결과 보고회와 보고서 발간	
2006년	4월	토론회 개최 (국제노동재단 회의실)
		해외 단체 담당자 초청교육
	6월	컴퓨터, 무역실무 등 센터별 실무교육 시행
	8월	현지 모니터링 사업진행
	9월	귀환 교육 실무자료 발간
	11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주관 현지 지원단체 실무자 교육

3. 귀환프로그램의 내용

1) 목적

귀환프로그램은 국내 이주노동자와 국내 이주 예정 노동자, 그리고 본국(송출국) 가족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이주노동자의 건강한 한국생활을 유도하고, 자국 사회개발 의식 고양과 모델 개발로써 이주노동의 악순환 고리 차단하고 귀환하는 이주노동자를 통해 아시아 사회개발 협력과 빈곤 극복 모색하는 것이다.

2)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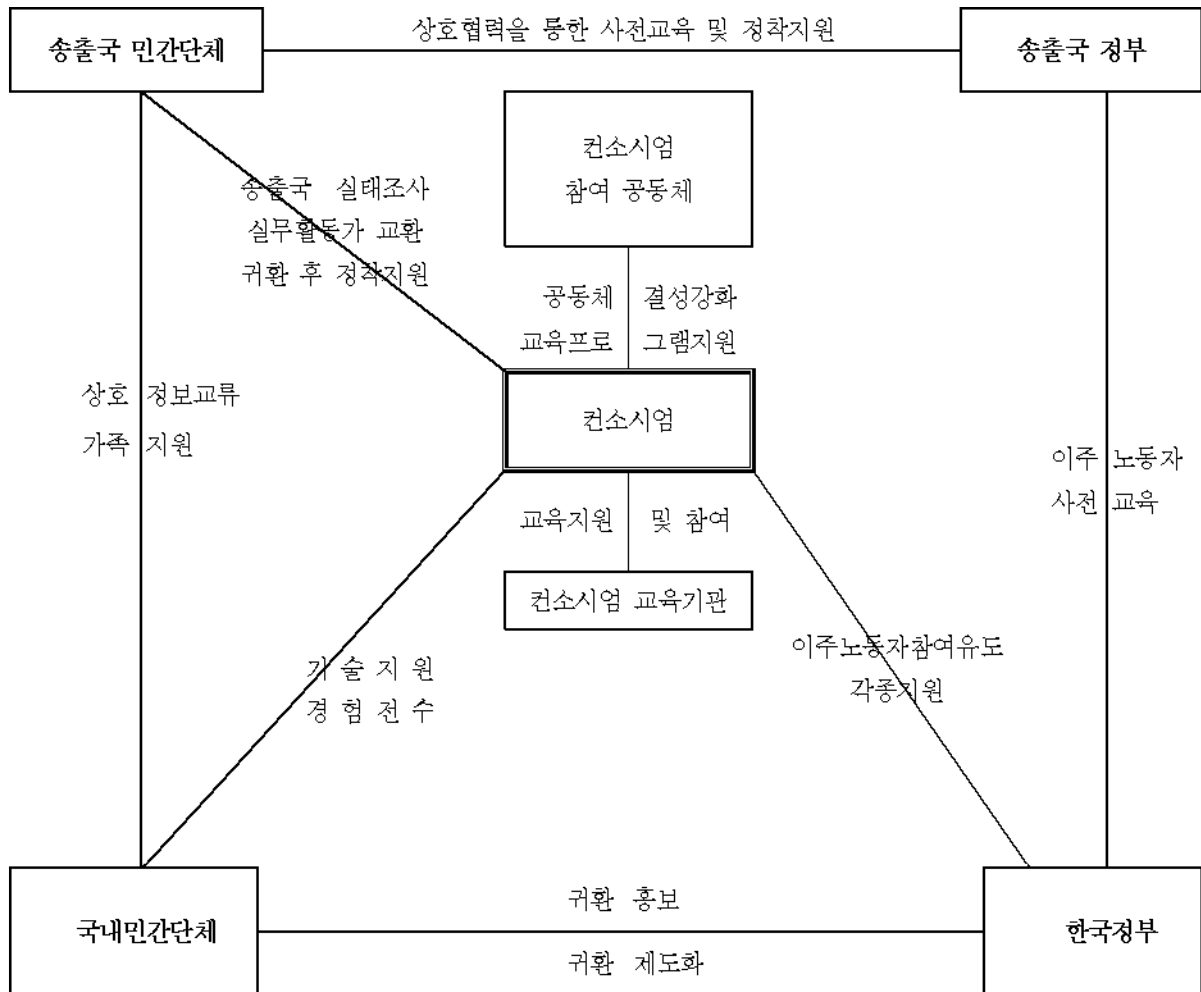
현재 귀환 컨소시엄은 18개의 이주노동자 단체가 결합되어있으며, 한국IOM과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신홍대학교 등 17여개의 외부 협력 단체가 연계되어있다.

3) 주요사업

귀환컨소시엄은 현재 3개 분야의 주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주요사업		주요 내용
1	네트워크사업	국내외 정부유관기관 및 단체, 해외 NGO 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정부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 사업대상국 현지 실무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상호 정보제공체계 확보)
2	교육 사업	① 기능교육 이주노동자가 귀국 후 지속적 활용 가능한 기술 교육을 습득 (자동차정비, 컴퓨터 활용법, 무역실무 등) ② 의식교육 공동체 의식 및 시민의식 교육을 통해, 본국 지역사회발전 기여 (나라별 공동체 강사양성 및 리더쉽 교육 등) ③ 입국(이주) 예정자 및 가족교육 한국으로 이주노동 이진, 한국 생활시 유의사항, 수입금 관리 등을 통해 가족의 이주노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대비하고, 계획적 이주노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 (국내 이주노동자 실상에 관한 비디오교육, 저축교육, 인생설계교육 등)
3	안내서 발간	귀환 및 재통합 컨소시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참가 필요성 유발을 위한 안내서 제작

4) 사업 흐름도



4. 귀환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1990년대부터 산업연수제도라는 현대판 노예 제도의 폐지와 새로운 합법적 이주노동 제도 확립요구가 끊임없이 이주노동자의 현장에서 제기되어왔으며, 2000년대에 들면서 이주노동 제도는 '고용허가제도'라는 틀로서 정리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감소를 위한 제도로 소개되었지만, 여전히 인권보호와 미등록의 문제가 남겨진 채 한국 사회의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끊임없는 강제단속과 20회가 넘는 실효성이 없는 자진 출국조치는 이미 이주노동자의 미등록의 문제가 단순히 정부의 정책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미 한국의 제조업은 자국 노동력으로 지탱하기 어려운 한국경제의 변화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본국 경제에 대한 미래적 전망을 상실한 상태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적 물리적 접근을 한다면, 이는 곧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단속과 도피가 반복되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입장에서는 이제 현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주노동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읽어내면서,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이주노동의 순환 해결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자 하였다. 이에 현실적 한계의 인식과 그 해결을 새로운 대안인 '자발성에 기초한 귀환'과 '분국사회와의 재통합'을 제기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귀환 컨소시엄'이라는 새로운 조직의 틀을 형성시켰다.

1) 귀환컨소시엄의 성과

본 컨소시엄은 '귀환'이라는 낯선 용어가 한국 사회 속에 이해되게끔 노력하였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단순한 돈 버는 기계, 혹은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하는 존재라는 낮은 자존감에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로서 그 자존감을 되찾는 교육적 의미를 획득 할 수 있었다. 귀환컨소시엄의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사회에 이주의 근본적인 이해의 기반을 제공
- 이주노동자에게 단순한 장기적 한국체류보다는 구체적인 삶의 목표 제공
- 이주 지원단체가 제 3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구체적 지원의 기반 형성.
- 인하대학교 · 신홍대학 등과의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이주노동자와 한국대학의 새로운 연결점 확보
- 삼성테크윈과의 연결을 통해 기업과 귀환의 새로운 모델 창출
-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저축과 투자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형성화
- 현지 이주노동자 활동가를 확보하여 귀환에 대한 사전 교육은 물론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성취

그러나 귀환컨소시엄으로 활동한 지난 만 3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현실적 한계를 제기하며 새롭게 극복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

2)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물론 등록이주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① 등록이주노동자: 전체적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한국사회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귀환에 대한 고민이 부족과 언어적 한계와 현실적 기능교육 시간확보의 어려움

② 미등록 이주자: 귀환에 대한 충분한 동의 자세가 확보되었음에도 단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장기적 계획 수립에 대한 어려움

3) 지원단체가 겪는 어려움

귀환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실제 프로그램 실천에 있어서 이주노동자 자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재로 귀환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맞춤형적 프로그램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귀환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컴퓨터, 무역실무, 차량정비 등의 일반적인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귀환으로 연결되는 바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보 파악과 지원 및 사업 발굴을 위한 여건이 미비하고 체계적 교육 사업을 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5. 귀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지원의 필요성

귀환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외국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교육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와 민간단체의 이주노동자 귀환에 대한 입장은 본질적으로 다른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IOM에서 제기한 귀환 프로그램제안에 대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입장이 몇 차례 언론에 언급되고는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기억은 없다. 그리고 이 귀환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소방안의 시각에 의해서만 접근되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와 달리 지원단체는 단순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해소방안이 아닌 이주노동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귀환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를 이주노동자의 시각에서 운영하여 정부와 기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지원단체 간의 시각 차이는 구체적인 실천에 장애만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다만 좀 더 깊은 이해와 인식을 이룬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우선 IOM에서 제시하는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 ① 귀환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 ②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노동사무소를 설치하여 학대와 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와 보상을 받는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 ③ 고용기간이 끝난 이주노동자들에게 귀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④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여 귀환을 지원한다.
- ⑤ 귀환노동자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귀환자들의 문제점, 진척사항을 모니터링 한다.
- ⑥ 민간단체, 노동자단체, 고용주단체, 이주노동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귀환 및 사회재통합에 대한 것을 지원한다.
- ⑦ 본국에서 필요한 기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저축한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⑧ 귀환자들이 저축한 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와 정보를 제공한다.
- ⑨ 귀환 과정의 모든 부분에 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상호협정을 체결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위의 9개 항목의 정부 역할에 대한 제안에 동의하면서, 정부부처와 기업체에 좀 더 구체적인 과제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부처

노동부

현재 노동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을 주관하는 중요한 부서로서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귀환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어 진다고 할 것이다. 특별히 2007년 고용허가제 시행이 3년 지난 올해에는 약 2,800여명이 이주노동자가 귀환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매년 30,000 명의 귀환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로 귀환 및 사회재통합 프로그램이다.

그러기에 한국 노동부에서는 송출국과 MOU를 체결할 시, 송출국 정부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출국 전에 갖는 교육 시에 귀환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받는 취업교육 기간에도 이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참여자에게 각종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이주노동자에게 현재 고용보험의 가입은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교육 지원 및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에 현재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이주노동자가 필요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귀환을 위한 기술습득을 위한 사업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제도 수정과 대책도 필요하다.

법무부

국내 이주노동자 중 미등록이주노동자가 현재 50% 가까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법무부의 심각한 고민과 고려가 요구된다.

미등록문제의 해결의 방식은 종래와 같은 강제적 물리력과 산발적인 자진 출국 기간의 설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귀환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본다.

현재 각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귀환 문제와 그 프로그램에 가장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주노동자 공동체 리더들은 대부분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며, 이들이 현재 겪는 귀환의 어려움은 귀환을 준비 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문제로 연계되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귀환 예정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하는 데, 즉 기술교육이나 경영자 수업을 책임성 있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육 기간 동안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심도 있는 교육을 위해 출입국법 위반 시 부과되었던 벌금은 국고를 사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민될 수 있다.

2) 기업체

귀환프로그램은 지원단체와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뿐 아니라 기업체의 발전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최근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연결되는 삼성테크윈의 경우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카메라 산업의 후발주자로서 제 3세계 시장의 가능성을 사업적으로 충분히 인식한 이 기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술교육이 작은 투자로 시작하여 가장 큰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귀환프로그램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 3세계로의 공장이전이나 자동차 수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적 파트너의 형성과 숙달된 현지 관리인의 양성 혹은 자동차 정비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제반의 문제를 귀환 프로그램과 함께 해나간다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상생의 기반이 될 뿐 만 아니라, 한국제품에 대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귀환프로그램은 단지 이주노동자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며, 한국 경제와 사회의 올바른 문제 인식을 짚어 볼 수 있는 전환의 축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귀환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인식과 지원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뿐 아니라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기업체 스스로의 장기적 전망 인식과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귀환프로그램과 이를 진행하는 컨소시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6. 나가는 글(다시 시작하며)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이주노동 경험이 있던 노동자를 만나면서 발견한 현실은 대다수의 전(前)이주노동자들이 자국에서 실업상태에 있었고, 그들은 다시 한국에 들어와 이주노동을 하길 원하고 있으며, 일부는 또 다시 홍콩과 러시아로 이주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주노동의 무한 반복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결론과 희망은 무엇일까? 끝이 없이 반복되는 순환의 이주노동의 현실에서 근본적 물음이 머리와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 3년을 보내면서 최초의 귀환 이주노동자를 직면하게 된다. 과연 이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하게 될 것인지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 귀환이 새로운 기간의 연장으로 약속되어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고용허가제로 복귀하여진다면, 이번 귀환은 단순한 시간의 유보일 뿐 이주노동자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이주노동자이 가지는 귀환에 대한 불안감은 단순히 한국정부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한국 내 약 2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이제까지 지속되어온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물음과 그 해결을 위해서 '귀환프로그램'은 단순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맺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장기적이고도 충분한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주노동자 귀환프로그램은 단순히 시혜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부, 기업체, 이주노동자, 송출

국의 새로운 미래 전망을 위한 아름다운 약속과 해결이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행복한 귀환과 재통합지원을 위한 각국 사례

최정의팔

(한국국제이주연구소 이사장,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을 마치고 귀환하여도 많은 경우 자신의 고향에서 사회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그 사회의 이방인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귀환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은 노동을 하거나 자영업, 그리고 또다시 다른 나라로 이주노동을 떠나는 것이다. 수입국에서 배운 공장기술을 썩 먹을 공장이 없어 그러한 노동을 계속할 수도 없고, 저축도 불충분하여 일하지 않고 지낼 수도 없고, 조금 저축한 돈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정보와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또다시 이주노동을 떠나는 것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비용 및 부정적 영향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투자와 사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내거나 본국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을 익혀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꿈을 실현할 때 이주노동의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 이주의 악순환을 끊는 새로운 방안 모색 절실

이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그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귀환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이 수입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것이다. 현재처럼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노동력으로만 간주하여 도입하는 상황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처럼 보인다. 더군다나 단일민족이란 허구 이데올로기로 인해 3년 순환정책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점은 더욱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장기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본국에 강제 추방한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사회를 꿈꿔야 할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다.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면서 장기간 우리나라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한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인 것이다.¹⁾

1) 국정 브리핑 2004-06-11에서 법무부 발표

1) 한국사회 통합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그렇기 때문에 귀환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본국으로 귀환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우려로 인해 귀환정책 프로그램은 이미 한국 땅이 제2의 고향이 되었고 본국에 돌아갈 수 없을 경우에 이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 부여하는 운동과 함께 전개해야 한다.²⁾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일부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것과 귀환하고 싶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그에 적절한 귀환대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을 동시에 전개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귀환하게 될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귀국하여서 일할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이런 점으로 인해 귀환을 준비하고 정착을 도와줄 프로그램 개발은 중요하다고 본다.

2) 경제문제 외의 문제들도 함께 생각해야

이주노동자들이 성공적으로 귀환하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통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준비에는 대안적 수입 및 경제적 자원 마련은 필수적이고 귀환 전 저축과 대안적 투자 및 기업설립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귀환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그들의 가족, 공동체 등 여러 부분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가족과 재결합하는 것을 뜻하는 재통합이란 의미를 덧붙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귀환 프로그램은 저축과 사업투자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여러 가지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³⁾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입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그러한 꿈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자신의 나라 현지의 상황에 맞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고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저축하고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운영하기 위한 경영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

3) 양국 정부와 지원단체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수적

효과적 재통합과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수입국과 송출국의 국가 및 지원단체들의 다각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수입국의 지원단체에서는 강한 소비성향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소비패턴을 변화시켜 저축을 유도하도록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귀환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유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경제발전의 노하우 및 창업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송출국의 지원단체는 수입국의 지원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귀환한 이주노동자는 물론이고 이주노동자 가족들과 협력으로 투자하여 운영할 적당한 사업체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마케팅 등 기업경영 컨설팅의

2) 한국에서는 2001년 2월 정대철 의원 대표 발의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는 장기체류 외국인 등의 영주권 취득과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시민권 심포지엄 자료집(2004. 6) 65쪽 참조.

3) 상계서, 90쪽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수입국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그들의 자발적 귀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송출국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보내온 송금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저축을 통한 투자가 지역사회,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러한 귀환프로그램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2. 귀환정책을 위한 다양한 해외사례

이주노동자 귀환 및 재통합 지원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활동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 의미 깊은 진전이라고 본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IOM)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특별히 경기도) 그리고 정부의 부서(특히 법무부와 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서 한국 상황에 맞게 정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개인적으로 성공한 귀환 사례

참 타파는 1997년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왔다가 2001년도에 귀국하였다. 그는 한국에 먼저 온 형 장 타파 씨의 도움으로 한국 농장에서 일하다가 그의 동생도 한국에 오면서 부모를 모시기 위해 다시 네팔 포카라로 돌아갔다.⁴⁾ 그의 아버지는 용병으로 일하다가 은퇴하였고, 그의 세 형제가 모두 한국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비교적 생활이 넉넉하였다. 그의 집은 대가족이어서 한국에서 보내온 돈으로 우선 집을 건축하였다. 현재는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조만간 한 층을 더 올려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서 살려고 한다. 그의 형 장 타파는 동대문에서 조그마한 네팔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황으로 힘들어했고, 그의 동생은 경기도 안산에서 일하고 있었다.

참 타파는 부모를 모시면서 한국에서 일하여 모은 돈으로 택시영업을 하였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한국에서 돼지농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돼지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네팔 나라 풍습으로는 돼지를 기르는 것은 그가 속한 계급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는 이런 것은 무시하기로 하였다. 식구들의 동의로 그가 한국에서 모은 돈을 토지구입에 사용하였다. 다른 이주노동자들처럼 대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번 돈을 다 써버렸다면 그는 토지를 구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저축(자본), 농장에서의 경험(기술), 그리고 택시회사운영 경험(경영), 그의 용기가 그의 꿈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는 동대문에 있는 형, 안산에 있는 동생을 모두 불러 들여 함께 5백여 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고 작년에는 정육을 위해 기술자를 한국에 보내 훈련시키기도 하였다.

4) 그를 필자가 만난 것은 2004년 10월 포카라에서 이다. 그는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경험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2) 조직적인 지원으로 성공한 귀환사업 사례

귀국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가 실패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귀환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 이 귀환프로그램을 1994년부터 홍콩에서 시작하여 대안투자운동((Migrant Savings for Alternative Investments)을 벌이고 그러한 성과로 1997년부터는 필리핀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업하고 있는 Unlad Kabayan과 그 운동의 대표인 메이안 여사를 만났다. 2005 3월 중순 메이안 여사가 일하고 있는 필리핀 다바오 섬에 여러 현장과 Unlad Kabayan 본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였다.

제일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국수공장이다. 국수공장을 만든 Jaime Jandug의 형은 사우디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San Petro College에서 생물학 교사로 10여년 일하다가 이 국수공장을 만들었다. 그는 형이 이주노동자로서 모은 돈, 그리고 Unlad Kabayan에서 대출한 돈으로 국수공장을 설립하게 되고 Unlad Kabayan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저축한 돈을 융자하는 것 외에도 공장경영 기술, 마케팅 전략 등을 지원하여 주었다. 이제 그 공장은 1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이 중 3명은 귀환 이주노동자가 일함) 앞으로는 국수공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제작을 위해 플라스틱 공장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공장은 규모로는 작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모은 돈으로 창설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코코넛 열매 분쇄 공장은 Unlad Kabayan이 이곳 시장 출신의 다른 NGO와 함께 공동출자하여 야심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공장이다. 다바오에 널려 있는 코코넛의 열매들이 주스를 추출하고 나서 버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열매를 거두어 들어 제품을 만들고 농촌에 일자리를 만드는 시도이다. 현재 소규모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익을 올릴 만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 3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그들에게 삶의 기반인 수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초에 이곳 관계자 한 분이 한국에 여기에서 만든 상품을 수출하려고 필리핀 상공회의소의 협력으로 내한하여 여러 관계 공장을 방문하여 수출을 타진한 적이 있다. 이 때 이곳에서 생산한 코코넛 가루 비료가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Unlad Kabayan은 1995년 이후 2004년 9월 말까지 131개 사업체 존속, 99명의 사업가 교육 및 원조, 3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한다. 5) Unlad Kabayan 의 여러 현장과 사무실을 방문하고 나서 비록 이주노동자의 공동체가 작은 힘이지만 서로 힘을 모아 공동의 비전을 창출한다면 귀환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5)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제 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자료집,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2004.9. 97쪽

3) 이주노동자 저축과 대안투자⁶⁾

MSAI(Migrant Savings for Alternative Investment)-CDR 오리엔테이션 세미나는 저축동기화와 투자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운라드 카바얀의 기초과정이다. 이 과정은 홍콩의 AMC(Asia Migrant Center)에 의해 그 개념이 정립되었으나, 유일하게 MSAI를 실행한 것은 1996년 필리핀의 운라드 카바얀이었다. MSAI는 이주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 일할 준비를 하면서도 왜 재통합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지에 대해 토론을 하는 3일간의 기초과정이다. 이 과정은 해외에서 일하는 위험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 과정은 귀환을 목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저축의식 개발과 귀환계획의 의미를 제공한다. 운라드 카바얀 기업개발프로그램의 경험을 근거로 한 학습은 지역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을 자극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득을 증가시키는 송금과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이주노동자 저축을 인식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개발과 재통합은 MSAI 과정의 한 측면인 것이다.

AMC는 협력 파트너인 필리핀 운라드카바얀의 경험을 토대로 AMC가 설립한 단체의 회원들에게 제공될 기초과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저축과 대안투자' - '지역사회 개발과 재통합' (MSAI-CDR)과 같은 재통합 프로그램 실행의 일환으로 저축그룹 구성을 독려했다.

- 1단계는 그룹 활력 강화가 협회의 회원이나 그룹이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 배양한다.
- 2단계에서는 이주의 현상, 이주노동 송출 및 수입요인, 국제노동시장의 배경, 이주노동자의 꿈과 희망, 이주노동자의 일상적 문제, 아시아 및 국내 이주노동운동의 역사, 자국의 경제 및 사회상황, 세계화와 빈곤문제에 대한 대안에 관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 3단계에서는 재통합프로그램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재통합프로그램의 합리성과 목표, 저축동기화의 가치, 저축 방법 및 계획, 지역별 저축그룹 결성 또는 유사한 실행 가능한 개념을 논의한다.
- 4단계에서는 대안적 투자에 관해 논의를 시작한다. 4단계에서는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이주노동자와 협회의 회원들이 기업가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
- 5단계는 저축그룹을 조직하는 실제 연습과정이다. 이 과정은 어디에서 이주노동자의 투자개념이 논의되는지, 어느 곳에서 재통합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디에서 자신들을 위한 재통합계획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향후 공유되고 다른 의견과 함께 논의되어 진다.

6) 이 부분은 2005년 한국에 온 Rosario Lumagbas Canete(Unlad Kabayan 부총무)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정책토론회에서 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서울외국인노동자발행 이주노동자 정책토론회에서.

4)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VARRP: Voluntary Assisted Return and Reintegration Programme)⁷⁾

국제이주기구 런던지부는 난민신청자와 본국으로 영구히 귀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로, 영국 Home Office와 유럽 난민 기금 재원으로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2002년 7월 이후, 재통합 지원은 동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세 가지 주요 요소, 즉 교육에의 접근, 훈련, 소규모창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재통합지원이란 귀환자가 본국에서 직업 교육, 교육, 고용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몇몇 경우, 귀환자가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국제이주기구는 귀환자에게 재정 원조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귀환자들이 재통합 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직업 교육, 교육, 고용 기회, 소규모 창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다. 재통합 지원은 귀환자의 필요, 자원,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통합 지원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컴퓨터 교육 (웹 디자인, 컴퓨터 관리, 컴퓨터 사용법 소개 등)
- 언어 수업(초급, 중급, 고급, 언어교수법)
- 이미용, 수리(정비), 칠, 목공, 건축, 농업 등
- 대학수준교육
- 어린이를 위한 공교육 (부모와 함께 ‘귀환 및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자발적 귀환자수 - 난민신청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5년	200	200	330	220	200	250
2006년	320	450	600	550	620	650

국제이주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본국으로의 귀환을 선택하는 난민신청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6월까지, 영국에서 자발적으로 귀환한 난민신청자 수는 2005년과 비교해 보면 두 배 이상인 132%에 달한다. 이러한 증가는 영국정부가 가족당 지원금을 1,000 파운드에서 3,000 파운드로 늘리는 등 귀환자에 대해 종합적인 재통합 지원을 확대한 것에서 기인했다.

7) 이 부분은 IOM에서 나온 자료를 이경숙 님이 번역한 것이다.

<자발적 귀환자수 - 미등록이주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5	18	28	30	32	28	38
2006	48	70	75	48	60	85

같은 기간 동안 국제이주기구의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귀환한 미등록이주민 수도 123% 증가했다. 미등록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귀환 지원 프로그램(AVRIM: Assisted Voluntary Return for Irregular Migrants)은 자발적 귀환자에게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한 프로그램과 동일한 지원을 제공한다. 단 소규모 창업 지원, 직업 교육 제공과 같은 재통합 지원프로그램은 난민신청자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는 미등록이주민을 위한 자발적 귀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권을 제공하고, 여행에 있어 필요한 서류 발급을 돕고, 공항에서 출입국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가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을 1999년이다. 2006년 2월말 현재, 국제이주기구 영국지부의 동 프로그램을 통해 귀환한 사람은 총 15, 500명에 달한다. 한편 2004년 11월부터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자발적 귀환 지원 프로그램을 최근 500, 000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확대하였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으로 귀환한 미등록자는 2006년 2월 545명이다. 국제이주기구 런던사무소는 미등록이주민을 위한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나라별 지역 공동체와 만나고 있다.

5) 스리랑카와 필리핀

스리랑카 해외취업부(SLBFE)는 자국민이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내용은 사망, 장애, 질병에 대한 보험 및 이주경비를 포함한다. 일정액의 신고비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신고를 할 경우 보험 처리 범위 등에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항 근처에 해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귀국노동자를 도와주고 있다.

필리핀 노동부 소속 해외취업행정기구(POEA)는 해외취업과 관련 사항 전반을 관장하는 정부기구이다. 이 기구에서는 취업전 훈련, 자격취득 및 규제, 법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귀국 후 과제를 실질적으로 다뤄온 기구는 해외노동자복지행정기구(OWWA)이다. 이 기구는 해외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고용주들이 일정액을 기부하여 만들어진 기금으로 운영되는데, 주 임무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해외노동자 귀국절차의 체계화, 해외 노동자의 재통합/ 재취업 활동지원이다. 그리고 귀국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 프로그램(ELP), 귀환 이주노동자의 재취업/재통합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재취업 및 관리센터도 있다.

3.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 협력요청사항

위의 여러 해외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도 그가 합법이든, 미등록이든 간에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노동력으로 보지 말고 고귀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볼 때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이다. 이주노동자들의 행복한 귀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귀환 이주노동자의 재취업과 재통합을 위한 직업 및 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다양한 노력들은 양국 정부, 양국 시민단체 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1) 정부 부서에서 지원할 일

노동부에서는 송출국과 MOU를 체결할 때, 송출국 정부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출국 전에 갖는 교육 시에 귀환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받는 취업교육 기간에도 이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결국 노동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도 본국에 돌아가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로 귀환 및 사회재통합 프로그램이다. 노동부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참여자에게 각종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예 고용보험을 통해 이주노동자 재교육 지원). 귀환교육을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협조할 것은 무엇보다도 귀환예정자에 대한 서류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산자부에서는 이주노동자 송출국과의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협력하고 또한 송출국 현지에 있는 한국기업과 협력을 맺을 수 있도록 가교를 놓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 도움으로 산업현장을 체험하게 함으로 본국에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출연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할 과제.

산업인력관리공단, 국제노동재단,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물론이고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폴리텍 대학,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정부 출연기관들은 귀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술을 전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3) 수입국 및 송출국 민간단체 협력체계

송출국 민간단체들은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이주노동자가 귀국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 미래를 위해 철저히 절약하고 송금된 돈을 생산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

국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귀환 후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입국 민간단체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귀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귀환교육에 참여하고 그 준비를 하여 자발적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공동체를 조직하는데 조력하여 이주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설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갈릴래아 귀환프로그램

활동가

(갈릴래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활동가)

1. 의의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노동활동을 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귀환프로그램은 이렇게 당연한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컴퓨터, 사업교육, 자동차 정비, 요리 교실 등 기술사용이 가능한 기능교육이 있으며

둘째, 저축과 투자가 있다.

사실 저축은 필리핀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다.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직 많은 것이 필리핀의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냉장고가 없으면 음식이 상하기 전에 빨리 먹어치워야 하는 것처럼 남편이 혹은 아들, 딸이 하루 13시간 이상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보내는 돈을 받자마자 써버리고 만다.

이렇게 보내진 돈으로 자녀들을 아주 비싼 사립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어떤 노동자들은 아주 좋은 집을 짓는다. 좋은 집, 좋은 차를 갖고는 있지만, 막상 노동자들이 귀국을 할 때쯤이면 현금은 거의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또 다시 그들을 가족과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장을 만드는 것부터가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교육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가령,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볼 때 매달 30만원을 저축한다면, 국민연금과 퇴직금, 저축을 합해 2천만원 가량 된다. 이 금액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금액이다.

2. 역사

1. 귀환 프로그램은 홍콩에서 1995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홍콩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정부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 그룹을 형성 ⇒ 교육프로그램 ⇒ 3년 동안 그룹저축 ⇒ 필리핀에 투자 ⇒ 민다나오와 마닐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2. 이후에는 대만과 일본에서 계속 귀환프로그램이 이어졌다.

3. 한국의 갈릴래아에서는 1998년도에 경기도 광주와 안산시 원곡동의 필리핀 공동

체를 통해 그룹을 만들었고, 유진신부님의 캐나다 유학으로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저축했던 금액은 환불해주었다.

4. 2005년 안산시 원곡동에서 필리핀 공동체 안에서 다시 귀환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때 제 1그룹이 형성되었다.

귀환프로그램에 대해 강의할 때 25명이 함께 했고, 50만원씩을 3회에 걸쳐 저축을 해서 1,3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 ⇒ 민다나오의 쌀 직판장에 투자했다. 이 직판장은 귀환프로그램을 제일먼저 시작했던 홍콩의 필리핀 공동체가 투자해서 설립한 곳이다. 현재 이 직판장은 한국의 제1그룹 25명이 투자한 1,300만원과 대만 그룹이 투자한 1,500만원으로 귀환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다.

5. 2006년 원곡동에서 제2그룹이 형성되었다.

50명 회원 확보를 목표로 교육 ⇒ 1년간 월 17만원씩 저축, 개인별로는 200만원 저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금액으로 필리핀 보홀섬에 연수원을 건설할 계획이다. 보홀섬은 세부에서 배로 1시간 10분 소요 되며, 마닐라에서는 비행기로 1시간 소요된다.

보홀섬을 연수원 부지로 선정한 이유는,

- 첫째,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고
- 둘째, 건축비 또한 저렴하고,
- 셋째, 천혜의 관광지로서, 필리핀에서도 1~2위에 속할 정도로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총 투자비용은 2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 노동자 회원 50명이 200만원씩을 투자하면 ⇒ 1억원이라는 기금이 조성이 되고,
- 3,000만원은 현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예정이고,
- 7,000만원은 후원자들을 통한 기금 조성 중에 있다.
- 땅의 면적은 1,210평이며 이미 구입을 한 상태이다.
- 기공식은 6월 5일이며,
- 완공 예정일은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 연수원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귀환프로그램의 후원단체는

갈릴래아 사목센터, 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말씀의 선교수도회, 외국인노동·운동협의회, 안산시청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컴퓨터교실).

맺음말

귀환프로그램은 가족적인 프로그램이다. 또한 심리적이며, 영성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일을 하다가, 혹은 길에서 붙잡힌 노동자들은 대책 없이 귀국을 하게 된다. 그 동안 그들이 외국에서 보낸 돈으로 자녀들은 사립학교에도 가고, 좋은 집과 가능하다면 차도 한대 산다. 그러나 그것을 이어나갈 현금이 없는 것이 지금껏 귀국 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더욱 귀국하

기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상황이 그들을 다시 외국으로 떠나게 만들고, 결국 가족의 해체까지 몰고 간다. 귀환프로그램에의 투자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옛 노동자들을 구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후원자들이 후원한 금액의 이율은 노동자들의 아기를 위해 쓰이게 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가족 사망시 작지만 쓰이게 될 것이다. 바로 상부상조의 개념인 것이다.

1970년대 중동으로 간 많은 한국의 근로자들의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기초가 되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필리핀 노동자들의 시작도 작은 연수원이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모두가 함께 하는 다국적 프로그램의 밑받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후원단체와 함께 지원단체도 소개할까한다.

안산지역 사회단체(YMCA, 의제21, 민예총, 여성노동조합)에서 이 프로그램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인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아직은 넘어야할 산이 많긴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기술교육 사례발표 자료

김연정

(경기도제2청사지역경제과)

I. 목 표

- 관내 3D업종 등 열악한 산업현장에 투입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국내 체류기간 중 적응력 및 생산성 향상
- 직업능력 개발로 자국 귀환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여 귀환활동 촉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II. 기본방향

- 시·군별 자체여건과 수요자 선호과정을 연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기술교육 경험이 풍부한 공인 전문 기술교육기관 위탁교육실시
- 운영방식은 내국인 직업교육인 「고용촉진훈련」 준용
※ 고용촉진훈련은 초·중급 직업능력자 양성이 목표로, 본 교육의 취지와 같음.
- 외국인근로자 관련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도(계획수립) ↔ 시·군(사업시행) ↔ 봉사단체(교육생 선정협조) ↔ 교육기관(교육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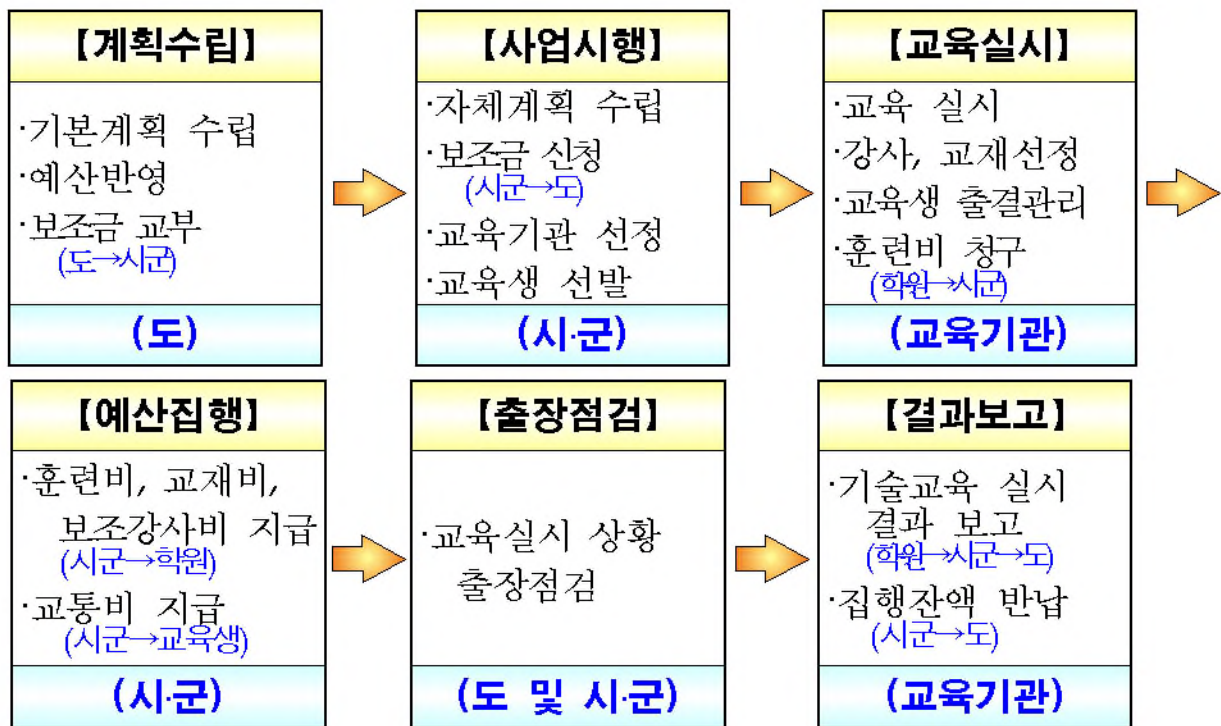
III. 사업개요

《교육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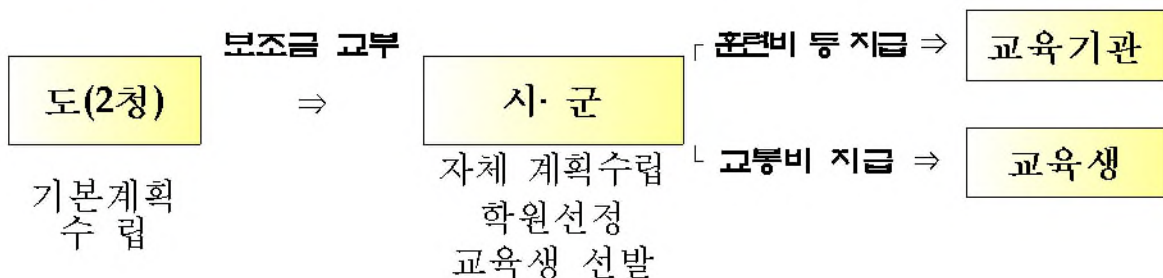
- 교육기간 : '07. 4월 ~ 8월 (공휴일 활용, 총 40시간)
- 교육분야 : 컴퓨터, 이·미용, 요리 등 수요자 선호과정
- 교육대상 : 관내 외국인근로자 약 150명
※ 외국인근로자수 : 포천시(6,286명), 양주시(6,082명), 파주시(5,498명), 고양시(4,797명)
- 운영방식 : 외국인근로자 다수 거주 지역 거점 시·군에서 추진
- 고양권(고양, 파주), 의정부권(의정부, 양주, 동두천), 남양주권(남양주, 구리, 가평), 포천권(포천, 연천)

- 교육방법 : 기술교육기관 또는 자체실정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
 - ※ '07 경기북부 노동부지정 고용촉진훈련 기관 : 17개소 (요리, 컴퓨터, 미용 등)
 - 사업비 : 도비 45,000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내용 : 훈련비, 교통비, 교재비, 통역비 등
 - ┌ 교육기관 지급 : 훈련비, 교재비(20,000/권), 통역(보조강사)비
 - └ 교육생에 지급 : 교통비(30,000원/명)
- ※ 위 지원금중 훈련비는 내국인 직업훈련인 「고용촉진훈련」 규정에 의거 책정함
- 산정금액 = 과목단가 × 학생수 × 시간 × 조정계수

《업무 흐름도》



《사업비 집행체계》



<참고>

2006 외국인근로자 기술교육 실시결과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06. 10.29 ~ 12.31 (10주, 40시간)
- 교육대상 : 외국인근로자 140명
- 교육분야 : 컴퓨터, 이·미용, 요리
- 운영방식 : 3개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주관
- 교육방법 : 기술교육학원 위탁교육
- 사업비 : 도비 45,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비	집행액	과정명	교육기관	교육인원	수료인원
계	45,000	39,663	3개 과정	5개소	140	108
의정부	7,000	5,483	컴퓨터	대원직업전문학교	20	19
남양주	18,000	16,576	컴퓨터	IT.com 컴퓨터학원	14	14
				남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16	16
			요리	남양주 미용·요리학원	20	17
포천	20,000	17,604	이·미용	현대 미용·요리학원	35	22
			요리	현대 미용·요리학원	35	20

※ 수료율 : 77% (수료기준 : 70%이상 출석)